

# ‘백신패스’ 도입 까닭은... “일상회복시 미접종자 보호”

### 발급한다면 접종완료자·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대규모 행사 등 적용 가능성 “도입여부도 결정 안돼...다른 제도들과 함께 논의중”

정부가 11월 중증화율 중심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 수단으로 언급한 ‘백신 패스’에 관심이 쏠린다.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국내에서의 ‘백신 패스’는 구체적인 방식은 물론, 도입할지조차 정해진 바가 없다.

앞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백신 패스에 대해서는 도입 여부를 비롯한 세부방안들이 아직 결정된 사항들이 아니다”라며 “현재 외국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관련된 세부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수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입장할 때 백신 접종 완료 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일종의 국내용 백신 여권(vaccine passport)이다.

백신 패스 발급 대상은 예방접종 완료자(기본 접종 횟수 접종 이후 2주 경과자)를 기본으로 특정 시간 내 유전자 증폭(PCR) 또는 항원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 소지자, 6개월 이내 코로나19 완치자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국내에 백신 패스가 도입될 경우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종이나 스마트폰 앱, 스티커 등으로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거나 별도 장치가 추가될 수 있다.

이때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12세 미만은 백신 패스를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예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12~17세와 임신부, 1차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 결정이 쉽지 않은 경우 등은 백신 패스가 엄격하게 적용되면 원치 않게 배제될 우려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 참여를 제한할지를 두고서도 답을 내기 쉽지 않다.

현재 국내에서 출입 자체가 제한되는 곳은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지역 유흥시설(집합금지), 4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 관람, 종교시설 모임·행사 정도다. 다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집합금지 없이 단계별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통해 밀집도를 낮추고 있다.

이런 한국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 미접종자에게 일부를 허용하지 않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4단계 지역 백신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도 식당·카페에서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 허용되는 데 백신 패스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국내에 도입하려는 백신 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 조치 완화로 확진자가 늘어날 때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손영래 반장은 “감염 위험성이 크거나 전파 위험성이 큰 시설의 경우나 대규모 사람들이 밀집하는 곳에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라며 “거의 모든 분들이 접종을 받게 되면 이런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게 될 것 이전에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백신 패스와 같은 제도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미접종자 차별 논란도... “제한적 도입해야”

### 유럽 국가, 봉쇄조치 해제하며 백신패스 도입 한국, 이용 제한했던 시설 미접종 이유로 제한 전문가 “오히려 백신 거부감 강화할 것” 우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기존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던 미접종자를 막는 차별조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신패스 발표 이후에도 미접종자 500만명 이상이 끝내 추가 접종예약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방역 당국이 기대한 ‘접종을 제고 효과’도 미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클럽·병원 등 고위험시설이나 다수가 이용하는 콘서트·실내 경기장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전면적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 ◆유럽 국가, 봉쇄조치 후 출구전략으로 백신패스 도입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 등에서 먼저 도입한 ‘백신패스’는 접종 완료자, 완치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 증명서다.

백신패스를 앞서 도입한 국가들은 강력한 락다운, 즉 봉쇄조치를 시행한 후 출구전략으로 백신패스를 활용했다.

영국은 세 번의 봉쇄령으로 상점과 미용실, 체육관, 야의 술집과 식당 등 수십만 곳이 휴업했다. 이런 상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을 완화한 조치가 접종 완료자·완치자에게 부여한 백신패스였다. 코로나 사태로 이용하지 못하던 시설이 이용가능한해진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락다운 없이 제한된 인원로나마 다중이용시설을 계속 영업했다. 백신패스 없이 상점과 식당을 이용하던 미접종자들에게 오히려 차별 조치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식당과 카페는 모두 출입을 허용하는데 백신패스를 도입하면 미접종자가 출입을 못하게 된다. 방역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흥업소 같은 감염위험업소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거가 별로 없다. 해외에서 하나까 우리나라도 하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외국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도입한다는 건데 윤리적 차별 문제가 있다”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이유는 종교적 이유, 자연주의적 신념, 의학적 과민반응, 부작용 우려 등 다양하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차별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백신패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도 남아 있다. 접종 완료자 외에 PCR음성확인자도 허용한다고 했는데 48시간 내, 72시간 내, 일주일 내 등 PCR 검사 효력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에게 백신패스를 부여할 것인지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도 백신의 면효과가 몇 개월까지 갈지 과학적 논의가 선행해야 한다.

#### ◆ ‘백신 인센티브’ 아닌 ‘디센티브’ 될 수 있어

김 교수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백신패스 도입은 오히려 거부감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외 백신패스 적용 사례

	독일	프랑스	덴마크
명칭	3G	Pass Sanitaire	코로나여권 'Coronapas'
적용시설 대상	실내행사, 병원, 요양원, 유흥 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 3G 해당자에 대해 주요 방역조치 해제(2021.8.23.)	장거리·지역간 이동, 극장·경기장 입장 등 ※ 백신여권을 전제로 대부분 조치 해제(2021.8.9.)	디지털 증명서 형태 발급 적용 시설 단계적 확대
인증 범위 기간	①백신접종완료자 ②음성판정자(PCR 48시간) ③확진후완치자	①백신접종완료자 ②음성판정자 ③완치자	①백신접종완료자 ②음성판정자 (72시간내)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부가 밝힌 백신패스 도입의 목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 최소한의 집단면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제한조치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 설명과 보상이 미접종자들을 끌어낼 방책이라고 조언한다.

장 부연구위원은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해도 보상해줘야 하는데 초반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불안감이 증폭된 부분도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나는 10월 말~11월 초를 백신패스 도입 등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로 제시했다. 접종 기회가 없었던 저연령층과 학생은 백신패스에서 예외로 둔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작동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 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견된 침묵으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자지란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